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연락담당 : 참여연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PSPD 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기자
발 신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연락담당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이경미 723-4253)
제 목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날 짜 2000년 6월 29일 (목) (충남쪽)

보 도 자 료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 전국의 39개 시민단체들이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정보공개청구 -

일시 및 장소 : 2000년 6월 29일 (목)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전국 각지의 39개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10개)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 접수시켰다.
2.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기존에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벌여온 지역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하여 올해 2월부터 결성 논의가 진행되어, 이날 발족을 하기에 이르렀다.
3.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민선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지 5년이 지나고,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된 지도 2년 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폐쇄적인 밀실행정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각종 정책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 또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발족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합’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구적 연대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납세자 권리회복과 깨끗하고 투명한 참여자치사회를 시민의 힘으로 건설하고자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발족취지를 밝혔다.

5.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일차적인 목표로 모든 종류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설정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발족과 동시에 전국의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110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돌입하고, 판공비 공개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할 것”라고 밝혔다.

6. 그리고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만약 비공개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그 결과를 낱알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지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 이날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식에는 일본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합회’ 동경시민옴부즈맨도 연대사를 보내어 왔다. 동경시민옴부즈맨은 『새로이 시민이 주역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연대사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지방관료가 중앙관료를 공급으로 접대하는 관관접대(官官接待)의 실태를 밝혀낸 일본의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합회’의 경험을 소개하며,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을 축하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순)

경산진보연합, 고창군 농민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참여연대,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목포시정지기단, 밝은사회를 위한 익산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순창군정지기단, 아산 시민모임, 안산경실련, 여수시민협의회,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영동지방자치연구회, 예산사랑주민연대, 울진참여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제천시민연대, 중평시민회,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주환경련, 해남군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참여자치대전 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별첨자료▣

1. 발족선언문
2. 판공비 공개운동의 현황과 네트워크 결성경과
3.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계획
4. 동경시민옴부즈맨의 연대사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선언

7월1일이면 민선지방자치가 전면 실시 5년을 맞는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된 지도 2년 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정보공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밀실행정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각종 정책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여 세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중요한 계약체결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낭비성 경비인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납세자인 시민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관선도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단체장들조차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마당에 다른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각 지역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시내 6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는가 하면, 올해 6월 16일에도 서울 행정법원이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앞으로 이어질 제주, 부산, 광주 등지의 소송에서도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담합’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정보공개청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에 대해 노골적인 ‘태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지구적 연대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오늘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각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자 한다.

39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발족 즉시 전국의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6개, 기초 110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판공비 정보공개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할 것이며, 만약 비공개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그 결과를 낱알이 공개할 것이다.

우리 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모든 종류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다. 판공비의 명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든, 사용자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실국장이든,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것인 이상 사용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대활동은 판공비 공개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성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나아가 시민참여로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감시 받지 않는 밀실행정에 낭비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나라곳간이 알뜰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권리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연대운동이 납세자 권리회복과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지역살림, 나라살림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참여자치사회를 건설하자.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순)

경산진보연합, 고창군 농민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참여연대,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목포시정지기단, 밝은사회를 위한 익산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순창군정지기단, 아산 시민모임, 안산경실련, 여수시민협의회,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영동지방자치연구회, 예산사랑주민연대, 울진참여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제천시민연대, 중평시민회,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주환경련, 해남군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참여자치대전 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전국일제 정보공개청구 참가지역 및 단체 (6월 28일 현재)

서울 (26개) : 서울특별시 - 참여연대

서울시내 24개 구청 - 참여연대

동대문구 - 동대문 푸른 시민연대

인천 (16개) : 인천 광역시-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 광역시내 구청 (8개)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강화군, 옹진군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경기(6개) : 경기도 - 안산 경실련

안산시 - 안산 경실련

의정부시 - 의정부 참여연대

성남시 - 성남 시민 모임

평택시 -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천 - 부천 시민연합

충남, 대전(12개) : 충청남도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 광역시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시내 구청 (5개) -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당진 - 당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예산 - 예산사랑 주민연대

공주 - 공주사랑 시민단체 협의회

태안 -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 모임

아산 - 아산 시민모임

충북(7개) : 충청북도 - 청주 시민회

청주 - 청주 시민회

청원 - 청주 시민회

괴산군 - 증평 시민회

영동군 - 영동 지방자치 연구회

제천 - 제천 시민연대

충주 - 충주 환경련

부산, 경남(22개) : 경상남도 -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광역시 -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시내 구청(15개구, 1개군) -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마산, 창원, 진해 -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진주 -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울산(5개) : 울산광역시 -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울산시내 구청(4개) -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대구, 경북(12개) : 경북 - 대구 참여연대

대구광역시 - 대구 참여연대

대구시내 구청 (7개) - 대구 참여연대

달성군 - 대구 참여연대

경산 - 경산 진보연합

울진군 - 울진 참여연대

전북(5개) : 전북 -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전주시 -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순창 - 순창 군정지기단

고창 - 고창군 농민회

익산 - 밝은 사회를 위한 익산 시민센터

광주, 전남(8개) : 전남 - 광주전남 정치개혁 포럼

광주 - 광주전남 정치개혁 포럼

순천 -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여수 - 여수 시민협의회

광양 - 광양 참여연대

목포 - 목포 시정지기단

영광군 - 영광 사회운동협의회

해남군 - 해남군민연대

강원(2개) : 강원도 - 춘천 시민연대

춘천시 - 춘천 시민연대

제주(5개) : 제주도 - 제주 범도민회

제주시 - 제주 범도민회

서귀포시 - 제주 범도민회

남제주군 - 제주 범도민회

북제주군 - 제주 범도민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현황과 네트워크 결성의 경과

1. 판공비 공개운동의 현황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 왔다. 그런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지역시민단체들이 늘어나 왔다.

2000년 1월에 취합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까지 전국에서 판공비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역시민단체들의 숫자만 25개가 넘고, 그 이후에도 판공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시민단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면공개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면비공개를 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공개를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담합을 형성하고 있다.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난해 8월에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서로 상의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판공비 정보공개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계속 시민단체들이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 시내 6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에서 판공비 지출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외에도 제주, 광주, 부산 등지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잇따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으로 있다.

<판공비 공개운동의 최근 주요일지>

- 1999. 11. 5.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 시내 6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
- 1999. 11. 25.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98년 7월 취임이후 사용한 판공비중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
- 1999. 12. 1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인천 구청장들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

개'하기로 결정.

- 2000. 6. 16.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판공비 지출관련서류는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순수한 개인의 인적사항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표1> ◆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현황

지역	시민단체	대상기관	소송일정	비고
인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시내 6개 구청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7. 7. 변론종결 예정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16개 구·군청, 부산교통공단, 시설관리, 도시개발공사		
광주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교육청, 전라남도교육국	7월중 판결선고 예정	
제주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ukum도민회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 예정	

2.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의 결성경과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판공비 공개운동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담합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시민단체들의 연대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시민단체들간에 정보나 경험을 교류할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2000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주최로 '2000년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워크숍'을 가지게 되었다. 워크숍에는 12개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고,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인 2000년 5월 두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발족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6월 29일 39개 지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판공비의 공개실태 및 집행실태

1. 판공비의 공개실태

현재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공개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개수준, 범위, 방법을 보면 정보공개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공개의 범위가 극히 미흡하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는 사례, 시장에게 배정된 판공비는 공개하나 부시장이나 각 실,국에 배정된 판공비는 공개하지 않는 사례, 현 시장이 사용한 것은 공개하나 전임시장에 사용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사례 등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기준에 의해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다.

둘째, 공개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인 참석인원, 모임의 목적, 사용의 상대방(간담회의 경우 참석자, 현금지급의 경우 수령인)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셋째, 공개의 방법도 매우 자의적이다. 청구인이 사본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해도,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은 분명히 사본청구와 열람청구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이다.

2. 판공비 집행상의 문제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를 열람한 것에 의하면 판공비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지출결의서의 작성이 부실하다. 간담회의 경우 참석인원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간담회의 경우에도 기관의 명칭을 적지 않고 “유관기관 간담회”라고만 표시해 놓은 경우가 많다.

둘째, 현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영수증도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않고 있다.

셋째, 실·국 예산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시장앞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사실상 없다. 똑같은 간담회라도 어떤 경우에는 시장앞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국예산에서 지출하기도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과다한 격려금, 선물, 간담회 횟수 등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계획

1. 취지

- 전국의 각 지역에서 판공비를 비롯한 여러 예산항목들에 대하여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기관들의 폐쇄적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예산지출과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공개되고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전국시민음부즈맨연락회의'에 소속된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매년 일제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국동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2. 시기

6월 29일 전국 37개 시민단체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제 정보공개청구(광역 16개, 기초 105개)

3.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참가단체 및 대상지자체

별첨 자료 참조

4. 일제 정보공개청구(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1) 정보공개청구의 범위 :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만이 아니라, 각 실,국이나 사업소, 특별회계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모두 정보공개청구함.
- 공개청구 대상시기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된 업무추진비로 함.

(2) 청구할 정보의 내용과 방식 :

- 정보의 내용 :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 청구방식 : 사본청구

(3) 비공개에 대한 대응방향

이번 일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제기.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지원가능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본인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소송을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작성한 '정보공개소송매뉴얼'을 이용하고, 소송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기위한 단체별 전담자문변호사(주로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를 참여연대에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함.

(4) 공개될 정보에 대한 평가계획

일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국의 자료를 공동평가할 예정임.

5. 일정계획

6월 29일 :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같은날 전국 일제 동시정보공개청구

7월말부터 8월초순까지 : 공개, 비공개여부 및 공개된 자료 취합. 1차 평가작업

8월말 : 평가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안) 청원(국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이 시민이 주역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일본에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가 결성된 것은 지난 1994년 7월 23일, 24일 센다이에서였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모인 수십여명의 시민들은 이날이 미래에 역사적 기념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민옴부즈만은 각지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관료가 중앙관료를 공금으로 접대하는 '관관접대(官官接待)'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문제삼아 결국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연간 약 300억엔 이상의 공금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현재까지 매년 전국 도도부현의 정보공개도 랭킹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을 벌여 허위출장(공무원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를 지급받는 부정행위), 공영공사의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밝혀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활동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결성되는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후 양국 시민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2000년 6월 29일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 도쿄시민옴부즈만
사무국장 타니아이 슈쵸(谷合周三)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의 발족에 부쳐

금일, 한국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가 발족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옴부즈맨운동은 지방자치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NGO단체에 의하여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은 주민투표운동과 함께 지방으로부터 정치를 개혁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NGO, NPO운동의 지평을 열어가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6월 30일

‘무지개와 생태 500인 리스트 운동’ 대표 마쯔야 키요시

**** ‘무지개와 생태 500인 리스트 운동’은 일본에서 시민운동 출신 무당파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으로부터 정치를 개혁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입니다.**